

# 아파트 주차공간 확보에 놀이터 줄어든다

### “주차난 해소” 호응 속 “아이들 놀 곳 없어” 불멘소리도 내년 1월28일까지 전기차 전용공간 의무...가속 전망

광주지역 아파트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놀이터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주자들은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며 호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아이들 놀 곳이 사라진다”며 불멘소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아파트 단지 주차면의 일정 규모를 전기차 전용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뜻하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놀이터 감소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5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은 총 24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8건 ▲2022년 7건 ▲2023년 9건,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9건 ▲북구 6건 ▲남구 5건 ▲서구 4

건 ▲동구 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광산구와 서구에서 각각 1건씩의 용도 변경 신청이 있었다.

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놀이터 용도 변경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등에 의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월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 2025년 1월28일까지 100세대 이상의 ‘기축 아파트’에서도 총 주차면의 2~5%를 ‘친환경차량충전 전용구역’으로 확보해야 해진다.

실제 지난 2007년 1월 광산구 산월동에 준공된 644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최근 어린이놀이터 부지 등을 전기차 충전시설(충전소)



광주의 일부 아파트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놀이터를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다. 사진은 용도변경을 위해 입주자 동의를 얻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등이 포함된 주차장으로 신설하기 위해 이에 대해 입주자 약 75%가 동의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부 계획 수립 후 용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학부모 김모(40대·여)씨는 “주변에 학교가 4곳이나 있어 학부모의 선호도는 물론 아이들도 만족하는 아파트인데, 놀이터를 없애면 어떡하냐”며 “집 가까이에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까지 사라지는 현실이 조금 씁쓸하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자 전모(20대·여)씨도 “기존 주차 공간 일부는 전기차 충전시설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며 “어른들이 불편을 감내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놀이터를 줄이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간 주차난을 호소하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설치를 미뤘으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이행 의무 화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며 “충전소 무상 설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에 몰릴 수 있어 상반기에 신청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학폭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 ‘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 처분받은 가해자 해당 대학 진학·취업까지 영향...삭제 기준도 까다롭게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

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집중·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처리해야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하지만 학폭위 조치의 졸업 후 삭제 가능 기준은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연합뉴스

## 檢, 민방위 훈련 빼준 공무원들에 실형 구형

### 광주 서구청 소속 2명

지인과 선배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이수한 것처럼 꾸민 광주 서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형이 구형됐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에 따른 징계는 처벌 시효가 지나 피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5일 공전자기록위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각각 3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광주 서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 C씨로부터 훈련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이수한 것처럼 행정시스템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8년 5월 다른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 A씨의 부탁으로 C씨가 민방위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자공문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한편 서구청은 지난해 1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A·B씨를 징계하지 못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라 A·B씨의 비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인 2021년 5월 안에 징계해야 했으나, 시효가 지나서다. /인재영기자

### ‘불씨 방지·부주의’ 화재 잇따라

영광과 담양에서 불씨 방지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6분께 영광군 법성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4시간30분여만인 오전 4시43분께 완전됐다.

이 불로 사상자는 없었으나 당시 초속 1m 정도의 바람이 불어 번져 주택 30㎡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 추산 3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11분께 담양군 대전면 한 들에서도 불이 났다.

쓰레기를 태우던 불씨가 초속 0.4m 정도의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번져 이 화재로 잡초 15㎡와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예초기 등이 타 4천3천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영기자

## “돌봄노동자 국가책임 실현·처우개선 해야”

###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촉구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노조)는 5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은 돌봄 노동자들의 국가 책임 실현과 함께 노동자들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 직

면하면서 돌봄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한국사회의 돌봄 정책은 공공성은 뒷전이고 민간 돈벌이 수단으로 사익을 보장해주는 역할로 전락했다. 임금체계만 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교사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반면, 돌봄 노동자들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임금과 낮은 처우는 결국 돌봄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내쫓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약속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서 해결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은기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